

2018-31

INSS 전략보고

러·일 경제협력 현황과 ‘신북방정책’과 연계성 고찰

2018.12

김숙현 연구위원

pol0901@inss.re.kr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최근 북방영토 지역에서의 러일 협력 동향
- III. 신북방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 IV. 정책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북방영토 지역에서의 러일 경제협력과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후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베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 즉 경제협력을 통한 영토반환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극동지역개발 및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극동지역에서의 한·러·일, 나아가 남·북·러·일 경제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방안을 미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과 러·일경제협력은 북방지역,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고, 각 정상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연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이 제반되어야 한다. 북방지역에 대한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를 강화하여 정상 간 신뢰구축 및 국민 간 신뢰도 동시에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핵심어: 신북방정책, 러일경제협력, 북방영토, 공공외교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극동지역에서의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러·일 경제협력의 진전의 가시화
 - 2012년 아베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아베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20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북방영토 해결을 위한 대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그 결과 2016년 5월 소치 회담에서 아베총리는 북방영토 문제에 관해 '새로운 발상에 근거한 접근'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시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기대가 최고 치에 이르렀음.
 -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기존의 협상식 어프로치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에 의한 접근은 러일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
 - 이 새로운 발상에 의한 접근은 북방영토 지역에서 평화조약체결 교섭에 관한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을 해피지 않는 '특별한 제도'하에 (1) 해산물 공동증식, (2) 온실채소 재배, (3) 관광 개발, (4) 풍력발전의 도입, (5) 쓰레기 줄이기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방 4도에 대한 공동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추진 중임.
- 신북방정책과 러일 경제협력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측면에서의 유사성 내재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과제목표는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임.
 -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및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실천 전략임.
- 신북방정책과 극동지역에서의 러·일 경제활동과의 연계성 모색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특히 문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가자는 것임.
 - 신북방정책의 추진은 러시아의 극동개발 및 한국의 경제적 지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 신북방정책과 러일 경제협력과의 연계성 검토 및 추진 전략 제언
 - 러시아와 일본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다면 극동지역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비핵화가 변수이나,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이 지역에서의 남·북·러·일 경제협력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극동지역에서의 소다자 협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극동지역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남·북·러·일 협력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러일 경제협력과 신북방정책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추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함.

II | 최근 북방영토 지역에서의 러일 협력 동향

1. 북방영토에 대한 러일 양국의 입장과 동향

가. 일측 입장

- 북방 4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
 - 북방 4도는 패전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치시마 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가 일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불법 점령한 상황이라는 입장
 - 전후 4개 섬 일괄반환만이 러일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북방영토입구론’을 주장했으나, 중층적 접근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통한 영토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북방영토출구론’으로 수정
- 아베정권 출범 이후 영토 반환에 대한 적극적 노력
 - 보수정권 집권 이후 4도 일괄반환 입장을 견지하면서 러일 간 영토문제 협상을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제2차 아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 마련

나. 러측 입장

-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2개 섬 반환
 -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북방 4도를 영토협상대상 지역으로 정하지 않고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체결 후 시코단과 하보마이 2개 섬을 반환하는 것임.

- 북방 4도는 일본의 패전으로 러시아가 점유했던 것으로 국제법상 러시아의 영토이고 일본이 북방 4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인정 후, 일소 공동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2개 섬을 일측에 자발적으로 양도하겠다는 입장

2. 아베정부의 북방영토 정책 및 추이

가. 아베정부의 대러 정책

- 북방영토 반환이 주요 목적
 - 2021년까지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아베총리는 집권초기부터 '북방영토해결'과 '안보강화'를 주요 외교적 과제로 상정
 - 푸틴대통령과 잦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고 2개의 섬을 먼저 반환받고자 하는 정책 추진(NSC와 경제산업성이 주도)
 - 북방영토의 반환이 성사되면 72년간 성과가 없었던 북방영토 반환에 아베총리의 커다란 외교적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림 1> 러일 간 영토 분쟁 지역(북방4도)



나. 푸틴정권의 신동방정책과 일본의 평가

- 신동방정책 추진 배경과 목표
 -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¹은 2012년 5월 제3기 푸틴 집권기를 전후해 본격화되었음.
 -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연방정부에 '극동개발부'를 설치하고, 2013년 2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을 수정·발표할 때도 극동개발의 의지와 신동방정책을 강조
 - 이 문건은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2013년 3월에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채택하였음.²
 - 푸틴의 신동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적으로는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 정책의 배경에는 첫째, 중국의 부상, 둘째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대한 돌파구 모색, 세 번째로 러시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新성장 동력 마련이 존재함.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시한 유럽 러시아는 인구규모와 경제력, 산업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비중은 4.2%(2014년 기준), 620만 명 수준에 불과하나, 극동지역과 접경해 교류가 빈번한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 명을 상회함.
-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인의 이주와 상권 장악으로 인한 침투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가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으로 편입해 극동지역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³

• 신동방정책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이러한 푸틴의 신동방정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매우 신중함.
- 일본은 구소련시대에 사할린 개발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는 소극적이며, 특히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 일, 한국 등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와 공동투자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농후

다. 최근 북방영토 관련 동향

•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새로운 어프로치 구상’ 추진

- 전후 일측은 일관되게 4개 섬 일괄반환으로 주장해 왔으나, 일소공동선언(1956년)이후 72년이 지난 현재도 성과가 전무
- 아베총리는 제2차 아베내각(2012년 12월) 출범이후, 최근 9월에 열렸던 동방경제포럼까지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 총력
- 작년 5월 소치에서 열린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는 ‘새로운 발상에 근거한 접근’ 즉,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신 어프로치 구상⁴을 제안
- ‘새로운 발상에 근거한 접근’은 4개 섬 일괄반환이 아니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2+ α 를 염두에 둔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
-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는 8개 항목⁵으로 이루어진 러일 경제협력플랜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높게 평가

• 북방영토 반환의 걸림돌은 ‘미일동맹’

- 작년 12월 푸틴대통령의 訪日에 따른 정상회담 시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실패로 돌아감.
- 실패 이유로, 작년 11월 러일 정상회담 추진 시 NSC 야치국장과 러시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안보회의의 서기와 회담내용 조율 중, 반환한 2개 섬(하보마이, 시코단)에 주일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을 타진해 왔음.
- 이에 야치국장은 주일미군주둔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러측은 안보상(미일동맹) 문제로 2개 섬 반환을 보류(아시히 신문 2016년 12월 26일 보도 참조)하면서 푸틴대통령은 訪日직전 미일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면 일본으로 반환되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미국의 방위 책임이 부여되고, 미군이나 무기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 아베총리의 공동경제협력을 통한 북방영토문제 해결 모색

-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8개 항목에 걸친 러일 경제협력플랜을 제안 이후 12월 15일(야마구치)과 16일(동경)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평화조약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결의를 표명한다”는 문서에 합의
- 소치 정상회담 이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의지를 보였던 푸틴대통령은 섬 반환 이후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우려 난색을 표명했으나, 아베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평화조약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성공
- 2016년 12월15일(야마구치)과 16일(동경)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결과, 북방영토지역에서 공동경제활동(어업, 해면양식, 관광, 의료, 환경 외 분야)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조약체결교섭’에 관한 러·일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제도’하에 북방 4도에 대한 공동경제활동 개시⁶
- 그러나 아베총리가 언급한 ‘특별한 제도’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에서 5개 항⁷의 공동경제활동에 합의
- 외무성 및 학자, 언론인들 가운데, 아베총리가 추진하는 ‘공동경제개발’ 계획이 북방영토에 대한 러측 주권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북방영토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동향

- 북방영토 인접지역(네무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4명 중 1명이 북방영토 元도민으로 북방영토문제와 실생활이 직결
- 元도민들은 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200해리 지정이후 북방영토해역에서 조업 중 러측에 나포 및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또한 북방영토에 토지를 포함한 재산, 조상의 묘소 등이 있고 원주민들 평균연령이 82세 등으로 북방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을 희망
- 다만 북방영토문제를 직감하지 않고 있는 타 지역의 일본국민들은 실제로 북방영토의 실상이나 반환에 대해 관심이 적고 비교적 소극적 자세 견지
-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방영토문제해결을 위해 북방영토지역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의견도 있음.
- 북방영토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왕래가 자유롭게 되며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임.
- 일본정부, 북해도청, 네무로시 등은 원주민 및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해 북방영토에 대한 실질적 협력 및 해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Ⅲ | 신북방정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 신북방정책의 추진배경 및 전략

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개념과 배경

-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북방정책의 목표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신북방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북방지역의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는데, 북한을 통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이 지역은 EU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임.
 - 이 북방지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도 직결되는 지역으로 인접국인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2017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 및 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정부의 한·러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북방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지역이 극동임을 적시하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개발을 위한 최적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구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하므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

-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함.⁸
- 취임 4개월 만에 중국, 일본 보다 먼저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북핵문제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나. ‘신북방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 신북방정책의 주요 전략은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제재로 막혀있던 나산-하산 물류 사업과 철도를 재개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
-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직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5일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 위원회의 역할은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⁹

(2) 북방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 신북방정책의 구현은 북한과 러시아를 주요 대상국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으로 2017년 9월 7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음.¹⁰
-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문에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중략) 그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업이다.”로 이른바 9개의 다리(9-bridge) 즉, 9개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

<그림 2> 9개의 다리(9-bridge) 전략¹¹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bukbang/> (검색일: 2018년 9월 25일)

(3) 신북방정책의 기대효과

-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및 균형외교 수립 등 한국의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
 - 한국의 신북방정책도 교통·물류·에너지와 관련한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가 핵심과제인 만큼 러시아, 중국, 몽골의 정책과 지향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및 물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
 - 중국도 일대일로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 중임.
 - 몽골 역시 2013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함.¹²
 - 유라시아는 세계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²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물류의 발전에 따라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비롯해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 중인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는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에도 도움이 됨.¹³

IV | 정책 제언

1. 주변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

- 주변국 정상외교의 강화 및 신뢰구축 마련
 -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러 3각 협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수준의 갈등과 미국과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안보 갈등, 동북아 역내 미,중,러의 불협화음 등은 추진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바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는 평가임.
 - 정상 간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음.
-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
 -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지역과의 경험의 제약요소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임.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야만 북한의 포함시킨 신북방정책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일본, 러시아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임.

<그림 3>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항구



2. 러일 경제협력과 ‘신북방정책’의 협력 추진 제고

- 러시아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공통된 이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 일본의 북방영토 지역의 러일 경제협력 추진과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방과 맞물리게 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소가 있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남북러일 경제협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러시아, 일본 측 관련 전문가 및 정부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신북방지역의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의 증진

- 국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에는 공공외교와 국민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북한의 포함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 등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국가들에 대한 공공외교와 국민외교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국가체제 및 경제의 상이점은 그 나라를 이해하기 어려운 제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와 K-pop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의 선진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가의 호감도를 증진하고 쌍방 간 문화교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역사, 전통 및 발전상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북방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학 진흥과 한국어 교육 및 확대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주요 대상국의 정책이해도도 고취시켜야 할 것임.
 - 공공외교나 국민외교는 정부가 하는 외교와는 달리 직접 국민과 국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김덕주(2017), “한·일·러 협력의 비전과 우리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5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해정(2018), “유라시아 북방협력, 평화와 경제 한번에 잡는다,” 『통일한국』 2018년 9월호

박지원(2017),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7-2

최태강(2015), “아베집권 2기 일-러 정치관계의 변화—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후해서” 『슬라브학보』 30권 2호

최은봉, 석주희(2012) “러일 북방영토 분쟁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책지향과 전망 – 주요 선언·성명·협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우준모(2012), “러시아의 영토의식과 지정학적 경계설정,” 『국제지역연구』 16-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장덕준(201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러시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

홍완석(2002),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6-2, 한국정치학회

우평균(2004),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아인 다이아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회보』, 38-3, 한국정치학회

– 인터넷 자료 –

청와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일본 외무성

일본 경제산업성

아사히 신문

주석

- 1) 푸틴이 신동방정책을 표방한 내용은 2012년 2월 일간신문 모스크바에 노보스찌(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푸틴은 그 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연례국정연설에 신동방정책의 기초를 설명했다.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러시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 pp.229-237 참조
- 2) 이 국가프로그램은 푸틴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에 마련한 전략적 상위계획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하위계획으로 구체적인 극동개발의 실천내용을 포괄한 것이다. 박지원,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7-2, pp.15-23
- 3) 우준모, ““신북방정책”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국제지역연구』 2018.1. pp.119-121.
- 4) 지금까지 정제되어있던 교섭을 물꼬를 트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양국이 수용가능한 해결책 작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상에는 없었던 ‘새로운 어프로치’로, 교섭을 정례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자는 인식을 양 정상에 공유했다. 일러 양자 간 시점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시점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사고에 입각한 교섭을 하기 위해 이 어프로치를 세워 다음 평화조약체결교섭을 6월중에 동경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인용)
- 5) 일본이 제안한 러일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협력플랜은 (1) 건강과 수명의 연장, (2) 쾌적하고 청결한 편안한 주거 및 활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3) 중소기업교류, 협력을 발본적 확대, (4) 에너지, (5) 러시아산업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 (6) 극동산업진흥 및 수출기회화, (7) 첨단기술협력, (8) 인적교류의 발본적 확대 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인용)
- 6) 러일 정상회담 합의 이후 주요 동향 (1) ‘북방4도연락조절회의’ 설치(2017.1.25.) (2) 공동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차관회의 개최 합의(2017.2.17.) (3) 성묘 등 왕래에 관한 개선 및 공동경제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북해도청) (2017.3.15.) (4) 러일 외무부장관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적근거를 검토 확인(2017.4.27.) (5)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정상회담에서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관민현지조사단 파견에 합의 (6) 하세가와 총리보좌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 69명 파견(2017.6.27.-7.1) (7) G20 러일 정상회담에서 8월 말 모스크바에서 러일 외무차관회의 개최로 조사단 결과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합의(2017.7.7.)
- 7) 5개항의 공동경제활동은 (1) 해산물 양식, (2) 야채온실재배, (3) 관광, (4) 풍력발전, (5) 쓰레기 절감대책 등임. 지난 6월과 7월에 1차 현장조사가 있었고, 10월 러일 관민조사단의 2차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음.
- 8) 2017년 9월 7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 홈페이지
- 9)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소개 및 홍보 참조 http://www.bukbang.go.kr/bukbang/about_pr/roles/ (검색일: 2018년 9월 5일)
- 10)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년 9월 7일)<http://www1.president.go.kr/articles/944> (검색일: 2018년 9월 5일)
- 1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9-bridge/ (검색일: 2018년 9월 6일); 성원용, “9-bridge 전략,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성공스토리 쌓아야”, 『통일한국』 2018년 9월 3일 <http://unikorea21.com/?p=19258>
- 12) 이해정, “유라시아 북방협력, 평화와 경제 한번에 잡는다”, 『통일한국』 2018년 9월호
- 13) 이해정, 위의 글

Abstract

This report aims to propose a strategy to seek and promot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Moon Jayne, the New Northern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the Russia-Japan cooperation in the Northern Territories area.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return the Northern Territories, but in a situation where he still does not see a solution,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since launched in 2012, a new way to solve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That is, they are seeking return of territor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fter taking office, Moon Jae-i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New Northern Policy” which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of the North-South Dollar dollar and promotes the “New Northern Policy”, and the Korea-Japan Russia in the Far East region, the South, North and Russia economic cooperation Since we can fully anticipate the possibility, we need to consider cooperation schemes in advance.

The New North Korea policy and the Russia-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have the common objective of northern areas and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we are proactively promoting each of the leaders, but we can see that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is sufficient. In the promotion strategy,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region has been acting as a major variable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various efforts for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ust be various.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diplomacy and national diplomacy in the northern region and to have a strategy to establish trust between usual and at the same time as reliability between the people.

.....
Key words: Russia Japan economic cooperation, The New Northern Policy, Northern Territories strategy, Abe Shinzo, Moon Jae-in Government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B/D
Tel. 02-572-7090 **Fax.** 02-572-3303 www.inss.re.kr